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미 의회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장관 및 의회에 정책권고를 하는 독립적이며 초당적인 정부자문기구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조약에 명시된 우리의 법률적 권한과 기준에 근거하여 이러한 정책권고를 한다. 2015 년 연례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년 연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14 년 1 월 31 일부터 2015 년 1 월 31 일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중대한 사건 중에는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도 있다.

북한

개요: 북한은 변함 없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북한 정권은 모든 정치적, 종교적 표현과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린다. 진정한 종교나 신념의 자유는 전무하다. 보도에 따르면 비밀리에 종교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은 체포, 고문, 투옥되며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 남한 사람이나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특히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처형된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을 포함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억압이 어느 정도인지 완전하게 확인하고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탈북자와 난민들의 직접 진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탄압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악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5 년에도 역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미 국무부는 2001 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 년 7 월에 지정하였다.

배경

북한은 오래 동안 조직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공포심을 광범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해왔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고 김 씨(氏) 일가와 정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우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준(準)종교적인 사회주의 사고방식은 개별화된 사상의 표현과 신념, 행동을 억제한다. 북한은 불교와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전에는 기독교 인구도 상당히 많아서 평양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뢰할 만한 통계치는 확보하기가 힘들다. 헌법에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원을 건설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성분 제도를 통해 모든 세대를 정권에 대한 충성도의 표현에 따라 분류하는데, 여기서 신자들은 최하층으로 분류되어 가혹한 대우와 박해를 받는다. 엄격한 종교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구금,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 통계 수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사람이 1만 5천명에 달한다.

201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설립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동시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사, 표현, 정보, 집회의 자유는 물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거의 철저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2014-2015년 종교의 자유 실태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정권이 명백하게 승인하고 운영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종교나 신념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종교이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기독교를 미국 및 서양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특별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불법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기독교인들은 보통 정치범으로 취급되면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상당히 가혹한 상황을
견뎌야 한다. 현재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처형을 당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교회가 몇 개 존재하기는 하는데 대개 인위적이며 국제적인
선전활동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제한적으로 몇 개의 교회에 허가를
주고 최고위층과 외국인들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평양에는 천주교회 한 곳, 개신교회 두
곳, 러시아 정교회 한 곳이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들의 회합을 철저히 통제한다.
일례로, 로마교황청은 교황의 2014 년 방한 기간 중 북한 정권에서 운영하는
조선천주교협의회를 미사에 초청했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지하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보안원들이 이러한 단체에 침투해 체포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고문당한 수감자들의 자백으로 지하 교회와 그 신자들 사이에 국가보안원들이
침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 기독교 활동 중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하면 방문 기간
동안 관리들이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기 쉽고, 정권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 년 5 월 말,
남한의 김정욱 침례교 선교사가 최대 500 곳의 지하 교회를 설립하려 한 것에 대해
간첩행위 혐의로 강제 노동 수용소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기 위해 김정욱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주민 33 명의 처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형 명령설에 대한 최초 정보제공자의 정보는 제한적으로, 기독교인 33 인의
운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라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수감자들은 매우 적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중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와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린다. 종교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기타 정치범들은 정권에 극도로 위험한 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 내 북한 난민: 최근 중국이 북중 국경의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박해와 기아를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한층 더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의 오랜 입장에 따라 중국에 허가 없이 입국하는 북한 주민은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난민 지위 부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 복송되어 가장 심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선교사들과 교류한 사람, 기타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는 또한 일부 중국 관리들이 체포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은 인권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강제 복송된 사람들이 구금과 고문을 당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중국은 수 차례 국경을 건넌 북한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복송된 사람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국제법에서는 송환 시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것으로 확신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 내에 공식적인 외교공관을 두고 있지 않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교류하고 비핵화 사안에 대해 양자 회담 및 6자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호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남한과 일본 등 역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14년 9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일본, 남한 등의 외무장관들과 인권 문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2014년 인권 및 종교의 자유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2014년 2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북한은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미국이 이 보고서의 작성과 뒤 이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인권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권고사항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인권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자체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북한은 또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 개막식에 외무상을 파견하고 인권에 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외교적 대응이 성과 없이 끝난 후인 2014년 10월, 북한 정권은 공공 장소에 성경책을 둔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Jeffrey Fowle)을 전격 석방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매튜 밀러(Matthew Miller)와 북한 정권을 위협한 혐의로 15년의 강제 노동 형을 선고 받은 선교사 케네스 배(Kenneth Bae) 등 미국인 두 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제프리 파울의 석방은 유엔총회 개막식과 북한에 관한 고위급 회담 이후 이루어진 반면, 매튜 밀러와 케네스 배는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을 초래한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이 통과되기 며칠 전에 석방되었다. 2014년 12월, 미 상원 보고서 발표에 이어 북한은 CIA 고문 사건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유엔에 촉구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은 2014년 11월 말에 발생한 소니 사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이 해킹 사건과 함께 해커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기밀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은 해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정은에 대한 가상의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에 대한 보복으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 고위 관리 10명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로 대응하였고, 의회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확대를 고려 중이다.

권고사항

2014년 한 해 동안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이 자행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었고, 유엔과의 공조를 확대하거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통해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2014 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새로운 진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평가하기 위해 5 년 내에 유엔 조사를 추가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와 유사하며 그와 연계된 실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북한과의 양자 회담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 문제를 회담 내용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안을 비핵화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적절히 포함시킨다.
- 일본, 남한 등 역내 동맹들과 협력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제 및 특히,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 폐쇄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 북한 내 그리고 국경 지역에 송신하는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및 인터넷 접속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기술을 모색하여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원을 독려하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 즉,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하고, 1951 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및/또는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강제 소환을

중단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 내 정보 및 언론매체의 접근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시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